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1019-10000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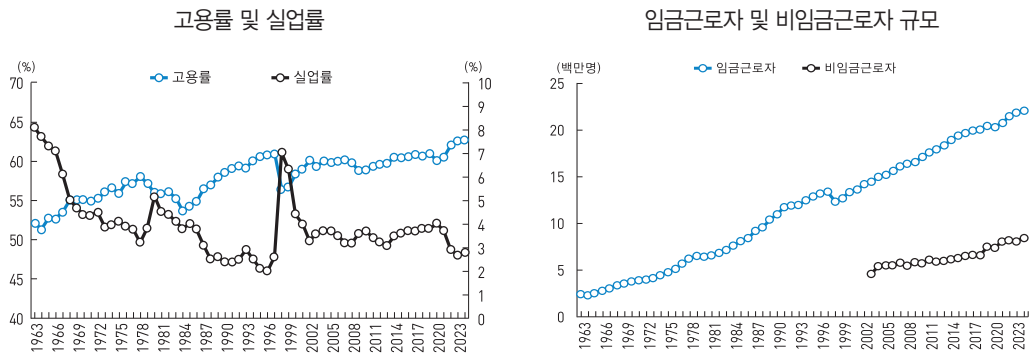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해방 후 ~ 1960년대	1970년대 ~ 외환위기 전	외환위기 이후 ~ 2000년대	2010년대 ~ 현재
비공식 고용 저임금/장시간 노동	정규직 중심 고용 노사갈등 확대	비정규직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취업 형태 다변화 사회보장제도 포괄성 확대

[시대별 주요 특징]

- (해방 후~1960년대)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였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형, 비공식적인 고용 형태였으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체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수준이었다.
- (1970년대~외환위기 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수출 중심의 제조업 고용이 증가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연공형 임금체계, 정규직 중심의 고용 관행이 정착되었으며, 노동운동이 확산된 이후에는 노사갈등이 심화되었다.
- (외환위기 이후~2000년대) 한국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과 불안정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확대되었다.
- (2010년대~현재) 노동시장은 기술변화와 인구 고령화 속에서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 근로 등 취업 형태의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 확대 및 고용안전망 재설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지표]



주: 출처, 정의 등은 본문을 참고하기 바람.



광복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인구구조, 제도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편되어 왔다.

1960년대까지는 인구 대부분이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나, 1970~1980년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2024년 현재 전체 취업자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¹⁾ 아울러 201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플랫폼 기반 경제의 성장에 따라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취업자 특성 측면에서는 인구 규모 증가 및 고령화, 고학력화 등이 동시에 진전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다수의 여성이 출산·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연령대별 노동 참여 양상이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등 구조적 문제와 관련한 과제가 남아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임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기업 규모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노사관계가 점차 제도화되었으나, 노사 간의 갈등적, 대립적인 관행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

로나19 팬데믹 같은 외생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모두 증대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위기 이후의 대응 과정은 사회보장 및 고용안정망 제도가 발전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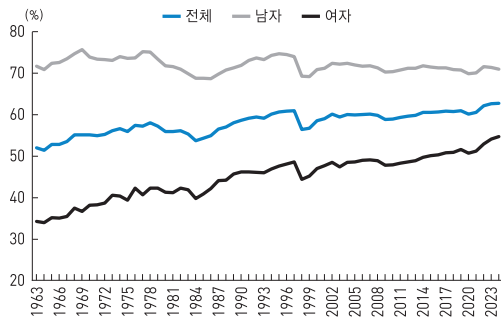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사회 구조적인 변화 요인, 경제위기 등 일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주요 노동 통계 지표에 기반하여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를 개관한다.

경제활동 참여

지난 6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주로 여성 고용률의 상승에 기인하였다(그림 V-1).

전체 고용률은 1963년 52.0%에서 2024년 62.7%로 서서히 증가해 왔으며, 남성 고용률은 대체로 70% 초반 수준을 유지해 큰 변화가 없

[그림 V-1] 고용률, 1963-2024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서비스업 범위는 정진호 외(2011)를 참고하여,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하였다.

었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34.3%에서 54.7%로 20.4%p 상승하면서,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률은 경제위기 등 주요 외생적 충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1970년대 후반에는 제2차 석유파동과 산업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고용률이 감소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약 4.5%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p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우 연간 고용률 통계상 충격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감염병 확산 초기에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시간에 따라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1963년 여성 고용률은 34.3%로 남성보다 37.3%p 낮았지만, 2024년에는 격차가 16.2%p로 크게 줄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로 남성 고용률이 정체 또는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상승 추이를 이어가고 있어서 향후에도 성별 고용률 차이는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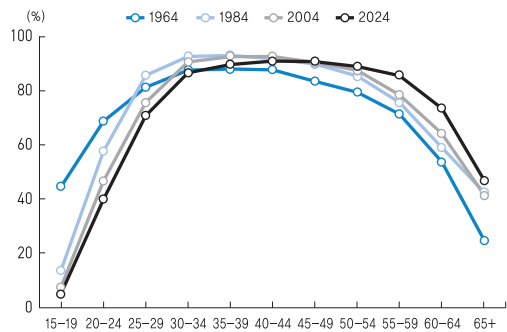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일자리 유지 및 노동시장 은퇴 시점도 시기별로 상이한 변화를 보였다(그림 V-2).

노동시장 진입 시점은 청년기에 이수하는 교육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연되었다. 15~19세 남성 고용률은 1964년 44.5%에서 2024년 4.9%로 39.6%p 감소했고,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도 22.5%p 감소했다. 10대 후반의 고용률 감소는 1960~1980년대에 더 두드러졌고, 이후에는 변화 정도가 완만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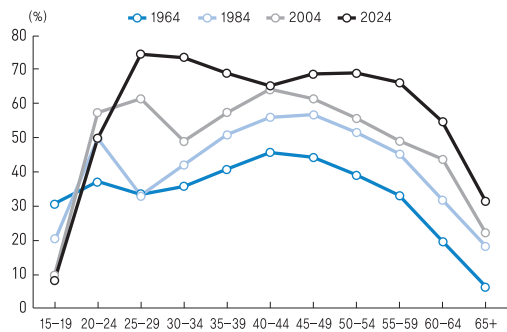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고용률 변화에서는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50대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변화 추이가 유지되었고, 시기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은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력 단절 양상이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984년에는 20대 초반과 후반

[그림 V-2] 연령대별 고용률, 1964-2024

1) 남성



2) 여성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2) 1964년 통계치는 조사통계국(1965: 198) 참조.
 3) 1984년 60~64세 고용률은 55~59세 고용률과 60세 이상 고용률의 중간값으로 추정, 65세 이상 고용률은 60세 이상 고용률로 대체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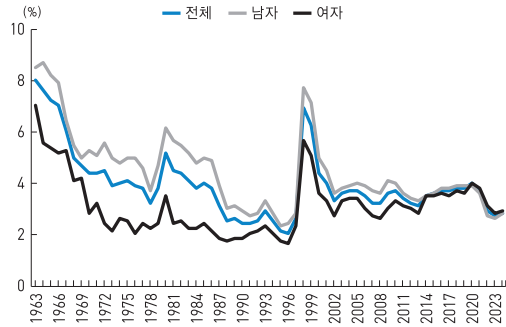
사이에 16.8%p의 고용률 감소가 나타났지만, 2024년에는 고용률이 감소하는 연령대가 40대 초반까지로 연장되었고, 고용률 감소 정도가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혼인을 감소, 결혼 및 출산 연령의 상승, 육아 지원 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령기의 노동시장 은퇴 시점은 시기별로 늦춰지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65세 이상 남성 고용률은 1964년 26.3%에서 2024년 46.9%로 20.6%p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도 23.3%p 상승하였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는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고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60대의 고용률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차이가 있다. 그 결과 7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20).

한국의 실업률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여건과 외부 충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해 왔으며, 장기적으로는 점진적 안정세를 보인다(그림 V-3).

196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상승하였고, 특히 남성 실업률은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 채 1980년대 중반까지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V-3] 실업률, 1963-2024



주: 1) 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의미함.
 2) 1999년까지는 '지난 1주간 구직'한 적이 있는 자를 실업자로 정의하였고, 2000년부터는 '지난 4주간 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로 실업자를 정의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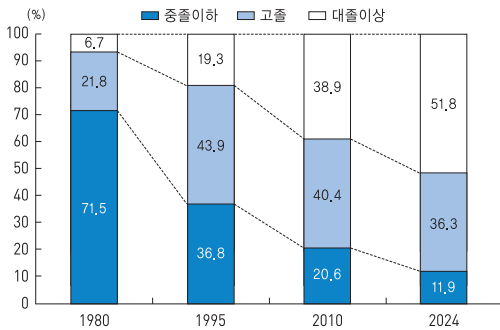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실업률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1996년 2.0%까지 감소했으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1997년 2.6%, 1998년 7.0%로 급등하였다. 이후 비교적 빠르게 실업률이 안정화되었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로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실업률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2000년대까지 남성 실업률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실업률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취업자 특성

한국의 교육 수준은 지난 수십 년간 빠르게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취업자의 학력 구성도 중졸 이하 중심에서 고졸·대졸 중심으로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그림 V-4).

[그림 V-4]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중, 198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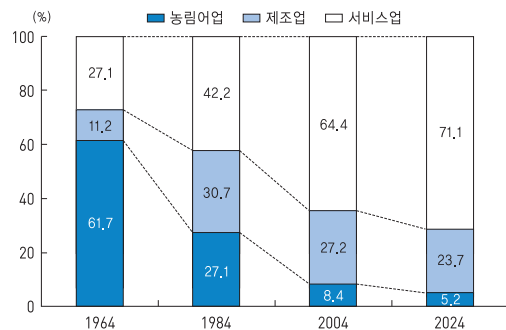
주: 1) 전체 취업자 중 해당 교육 수준 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980년에는 취업자의 대부분(71.5%)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지만, 2024년에는 그 비중이 11.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비중은 같은 기간 6.7%에서 51.8%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때(1990~2010년대 초반)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후 대졸 이상 취업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교육 수준의 변화는 특정 연령대에 한정해서 보면 더 두드러진다. 예컨대, 현재의 고령 취업

자 중에는 중졸 이하 저학력자 비중이 매우 높지만, 최근 고령기에 진입한 세대는 고졸 학력자가 더 많고, 앞으로 고령기에 진입할 세대는 대졸 이상 학력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고학력화가 진전될수록, 더 많은 고령자가 본인의 경력이나 전문성에 맞는 일자리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지만, 노동시장에서 고령 노동력 수요는 감소 추이가 관측된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 대상 직업훈련 확대, 고령 근로자의 직무 재설계와 관련한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림 V-5] 교육 수준별 취업자 비중, 1980~2024



주: 1) 취업자 중 산업별 해당 취업자 비율을 의미함.
2) 제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포함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의 산업구조는 지난 수십 년간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를 거쳐, 현재는 서비스업 중심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그림 V-5).

1964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61.7%가 농림어업에 종사했으나, 1970~1980년대 산업화 시기에



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제조업 부문으로의 고용 이동이 급격히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2024년 농림어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소폭 반등하고 있지만, 전체 취업자 내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 비중은 1964년 11.2%에 그쳤지만, 정부 주도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취업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1984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30.7%를 차지하였다. 농촌의 농업 종사자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제조업에 신규 노동력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4년 기준 제조업은 전체 취업자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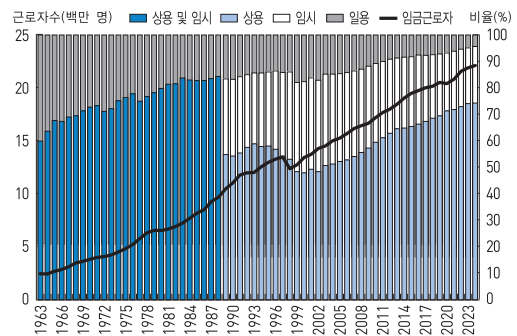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광복 이후 대부분의 시기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1964년 27.1% 수준이었던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84년 42.2%, 2004년 64.4%를 거쳐서 2024년에는 71.1%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돌봄 수요 증가와 소비 행태 변화로 인해, 서비스업 내에서도 보건·복지, 운수·물류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여러 종사상 지위 중에서는 임금근로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현재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그림 V-6). 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와 달리 노동시장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

이다. 따라서 이들의 규모 확대는 정부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1963년 임금근로자는 23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31.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2,204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의 77.1%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상용직 근로자 확대에 기인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1989년 54.8%에서 2024년 74.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임시직 비중은 28.6%에서 21.6%로, 일용직은 16.6%에서 4.2%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림 V-6] 임금근로자 규모 및 구성, 1963-2024



주: 1) 1963~1988년 조사에서는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았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임금근로자 규모는 임금근로자와는 다르게, 시기별로 변화 양상이 차이를 보였다(그림 V-7). 1963년 518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803만 명에 이르렀으나, 이후부터는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4년에는 65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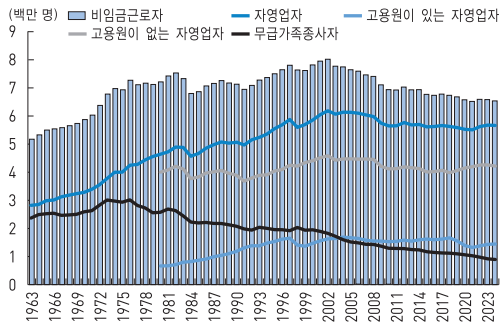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 내부 구성은 시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다. 1963년에는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 규모(282만 명)와 무급가족종사자 규모(236만 명)가 비슷했지만, 이후 자영업자와 고용주 규모는 2002년까지 621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기간 181만 명으로 감

소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자영업자와 고용주 규모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고용주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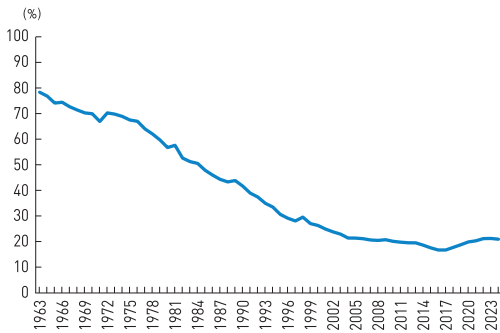
한편, 1990년대 후반까지 비임금근로자 중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에는 농림어업이 비임금근로자의 주요 활동 분야였지만,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상당수가 제조업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다. 2000년대 이후로는 비임금근로자 내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약 20%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V-7] 비임금근로자 규모 및 특성, 1963~2024

1) 하위집단별 규모



2) 농림어업 비중



주: 1) 농림어업 비중은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을 의미함.

2) 1963~1979년 조사에서는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았음.

3) 농림어업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과거 연도 자료의 경우 수록된 책자의 판본에 따라 개정되어 수치가 다를 수 있음.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일자리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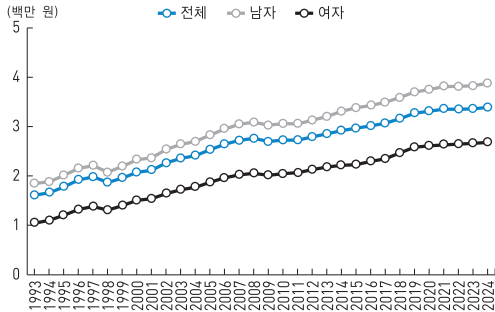
임금

임금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지난 30여 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V-8).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 경제성장 국면에 힘입어 실질 임금이 빠르게 상승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났다. 이후 경기 회복과 함께 임금 수준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다수의 기업이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소비 위축과 유가 하락으로



[그림 V-8] 월평균 실질 급여, 1993-2024



주: 1) 1998년까지 상용 10인 이상, 1999년부터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급여액의 평균을 의미함.
 2) 물가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CPI) 기준으로 조정하였음.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둔화되면서 통계상 평균 실질 임금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임금 지표는 노동시장에서 취업 지위를 유지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시에는 노동시장 충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이후의 경기 회복 시기에도 실질 임금이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평균 실질 임금의 변화 정도가 과거에 비해 완만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상승률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편, 2018~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개선되면서 평균 실질 임금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충격이 집중되면서, 통계적으로는 실질 임금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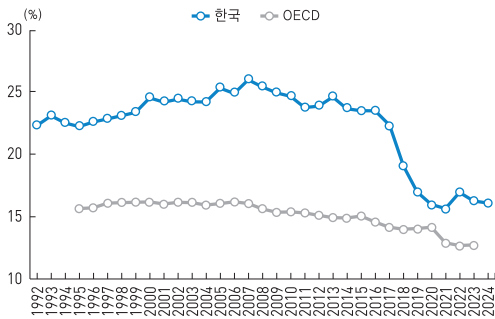
한편,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 영세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집중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실질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평균 실질 임금이 완만히 증가하는 추이가 관측되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내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줄곧 OECD 평균 이상의 비중을 유지했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변화 양상이 관측되었다(그림 V-9).

1970~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해 왔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2~23%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영세제조업 부문에는 여전히 저임금의 비공식 일자리 비중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점이 원인으로 지

목된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흐름이 확산되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6년 22.6%에서 2000년 24.6%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2007년에는 26.0%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림 V-9] 저임금 근로자 비중, 1992-2024



주: 1) 전체 전일제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임금이 중위값의 2/3 미만인 전일제 임금근로자 규모를 의미함.
 2) OECD는 1995년부터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4년 통계는 2025년 7월 기준 미공표 상태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2025. 07.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노동시장 충격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의 취약 집단에 더 집중되었고, 이후 제조업과 공공부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부터 고용이 회복되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났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한 시기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급격히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2017년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2.3%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7.0%로 2년 동안 약 5.3%p 감소하였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의 부정적인 변화도 보고되었지만, 최저임금 조정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분명해 보인다.

팬데믹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둔화되었지만,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저임금 비중이 높은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통계상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팬데믹 전 수준까지 다시 상승하였다.

2024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6.1%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약 10%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오랜 기간 OECD 평균(15% 내외)을 상회했으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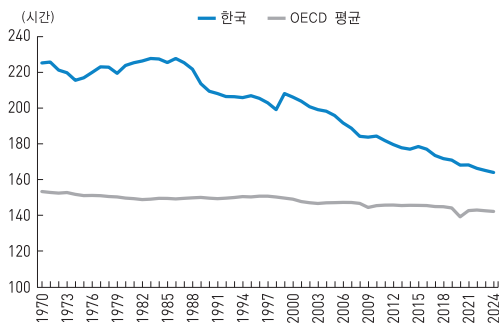
한국의 근로시간은 과거 장시간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며 점차 단축되는 변화 추이를 보였고, 최근에는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그림 V-10).

1970년 한국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25.3시간으로, 당시 OECD 평균인 153.4시간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장시간 근로를 장려하는 관행은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고, 1986년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227.8시간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1987년에 노동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이후 1989년에 주 44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던 근로시간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잠깐 증가했지만, 2000년대 들어서 주 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 및 확대되면서 다시 감소 추이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었다.

[그림 V-10] 월평균 근로시간, 1970~2024



주: 1) 국내 통계치는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제한하였음.
 2) 통계치는 해당 연도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을 의미함.
 3) OECD 평균은 국가별로 조사 대상이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OECD, *OECD data explorer*, 2025. 07.

2010년대 중반에 근로시간 감소 추이가 다소 정체되었지만, 2018년에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64.1시간으로 여전히 OECD 평균(142.3시간)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지만, 분명한 감소 추이가 관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는 근로시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 관측되며, 당분간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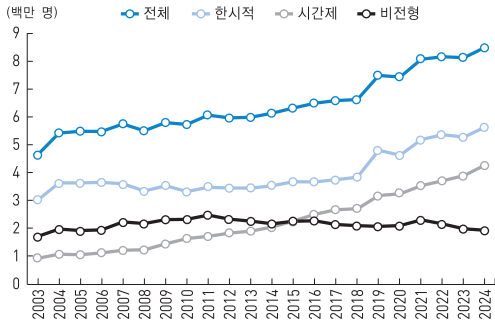
비정규직

2003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그림 V-11).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여성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비정규직 규모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018년에는 비정규직 규모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 등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더 증가했다. 2024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845.9만 명이고,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세부 유형에 따라 상이한 변화 추이를 보였다. 한시적 근로자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2004년과 2019년에 규모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간제 근로자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기업의 인건비 절감 노력,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이 맞물리며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전형 근로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간접고용 수요의 증가에 따라 확대되었으나, 이후 불법파견 규제 강화와

[그림 V-11] 비정규직 규모, 2003-2024



주: 1)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포함함.
 2)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를 말함.
 3)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용역, 특수형태, 재택 또는 가내 근로, 일일(단기) 근로자를 포함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8월)」, 각 연도.

감독 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대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취업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이 집단은 현재의 비정규직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지표만으로는 노동시장 내 고용구조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생활 균형

유연근무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일·생활 균형 확대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여겨진다(표 V-1).

<표 V-1> 유연근무 및 육아휴직, 2015-2024

(단위: %)

연도	유연근무 이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부	모
2015	4.6	4.7	4.6	19.1	0.6	59.1
2016	4.2	4.3	4.0	20.0	0.9	60.4
2017	5.2	5.5	4.9	21.6	1.8	62.2
2018	8.4	9.2	7.3	22.5	2.4	62.9
2019	10.8	12.2	9.0	24.0	3.0	64.6
2020	14.2	15.9	12.0	25.5	3.6	65.7
2021	16.8	18.2	15.2	27.0	4.3	66.9
2022	16.0	17.3	14.4	31.2	7.1	71.1
2023	15.6	17.1	13.9	32.9	7.4	73.2
2024	15.0	17.1	12.6			

주: 1) 유연근무 이용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육아휴직 사용률은 연도별 출생아 부모 가운데 해당 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비율임.
 3) 육아휴직 이용률 2023년 자료는 잠정치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각 연도: 「육아휴직통계」, 각 연도.

2015년 4.6%였던 유연근무 이용률은 2019년 10.8%로 6.2%p 상승하였다. 2017년에 정부가 일·생활 균형 정책의 추진 전략을 수립한 것이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후 팬데믹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필요성에 따라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활용되면서 2021년 이용률이 16.8%까지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이용률이 소폭 감소하는 양상이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의 유연근무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상대적으로 유연근무 도입에 적극적인 IT, 금융 등의 업종에 남성 근로자 비중이 여성보다 더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유연근무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육아휴직은 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여성 근로자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격차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9.1% 수준이었으나, 남성의 사용률은 0.6%에 불과했다. 이는 출산과 양육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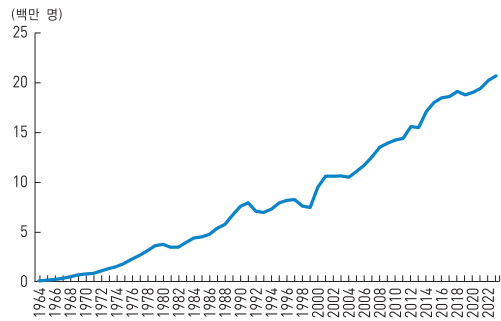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변화 양상이 관측되고 있다. 2024년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7.4%로 2015년의 0.6%와 비교하면 약 12배 이상 확대되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남성 육아휴직이 점차 활성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아직은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여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성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 적용 근로자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V-12). 산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광업과 제조업의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으나, 이후 1980년대에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완화했고, 1990년대 초반에는 1인 이상 사업장 및 비제조업으로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였다. 이후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확대되면서 산업재해 적용 근로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

다. 최근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림 V-12]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규모, 196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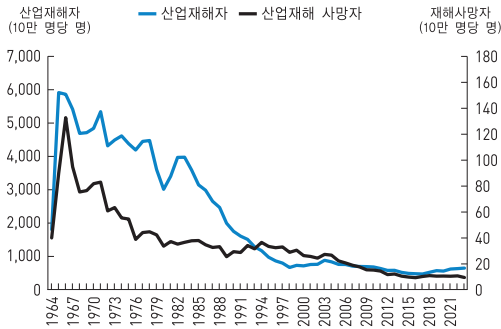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규모의 변화 추이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규모의 확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그림 V-13). 산업재해자의 절대 규모는 198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10만 명 중 재해자 규모는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60~1970년대에는 산업화의 급속한 전개와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 부문에 노동력이 집중되었고, 산재보험이 이들 산업에 우선 적용되면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재예방 정책 확대,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재해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그림 V-13] 산업재해자 및 사망자, 1964-2023



주: 1) 산업재해자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을 겪거나 사망한 근로자 수임.
 2) 산업재해 사망자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중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각 연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산업화 초기인 196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후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적 대응이 이뤄지면서 1970년대 후반까지 빠르게 감소했다. 이 시기에는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이 일부 포함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정 수준의 사망자 수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산업안전 인식 제고, 법적 규제 강화, 예방 기술의 발전 등에 힘입어 사망자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²⁾ 다만,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규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따라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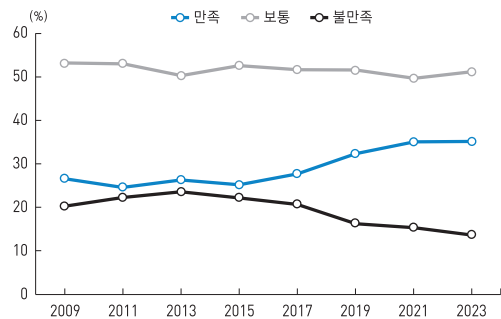
2) 사망자 통계는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 발생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변화 추이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대응이 필요하다.

일자리 만족도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완만히 증가하는 추이가 나타났다(그림 V-14).

[그림 V-14] 일자리 만족도, 2009-2023



주: 1)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이고,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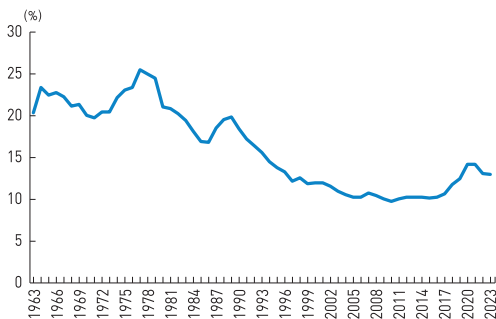
조사 시점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2009년 26.6%에서 2023년 35.1%로 8.5%p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본인의 일자리에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6.6%p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확대, 일·생활 균형 정책 확대 등의 변화가 누적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보통”으로 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사관계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산업구조 변화와 제도적·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시기별로 뚜렷한 등락을 보여 왔다(그림 V-15).

[그림 V-15] 노동조합 조직률, 1963-2023



주: 1) 조직 대상 근로자 규모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 연도.

1960~1970년대에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와 정부 주도의 노동조합 운영 등이 맞물리며 비교적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나타났지만 이를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1980년대에는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조직률이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조직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조직률이 반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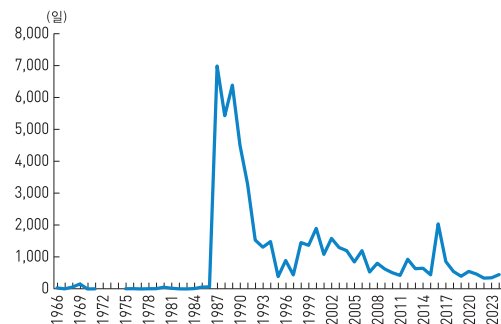
1990년대 이후는 노동시장 유연화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외주화와 아웃소싱 등이 확산되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였다. 2010년

대 후반에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 양대 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노력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소폭 반등하는 추세가 관측되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동쟁의의 강도와 사회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노동운동 전개 양상과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시기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V-16).

1980년대 중반까지는 군사정권의 강력한 통제 아래 관제노조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급증하였고, 이후 노사관계가 제도화되면서 점차 감소 추이로 전환되었다.

[그림 V-16] 근로손실일수, 1966-2024



주: 1) 노동쟁의로 인해 근로가 이뤄지지 못한 일수를 의미하며,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이 지속된 일수의 곱으로 계산함.
2) 1971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1972~1974년 기간 행정관청이 단체교섭을 조정 결정하였고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았음.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노동통계연감」, 각 연도; 「노사분규통계」, 각 연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했으나,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이가 나타났다. 2017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확대되면서 근로손실일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가며

광복 이후 한국 노동시장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거쳐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종사상 지위도 자영업 중심에서 상용직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인구 및 가족 구조 변화,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여성과 고령층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되었다.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분야의 제도적인 틀이 갖춰졌고,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전되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수형태 고용과 플랫폼 노동 등 취업 형태가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앞으로 노동시장이 직면할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노동시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혁신을 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정진호, 김정한, 김동배, 이인재. 2011.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한국노동연구원.
 조사통계국. 1965. 「한국통계연감」.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publishing.